[기고] 동북아 역사전쟁 중장기전략 시급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의 역사분쟁은 기왕의 한·일 역사쟁론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역사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는 특히 일본이 영토확대를 목표로 동북아시아를 역사분쟁지대로 만들려는 의도와도 연결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은 1996년 이미 중국사회과학원 핵심연구과제로 고구려 연구를 진행했으며 2002년 5개년 계획의 동북공정을 시작하고,2003년 중국지역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해 결국 2004년 6월 북한과 함께 동시에 등재됐다.

이후 중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축제를 3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일사불란하게 외교부 홈페이지 고구려를 우리 역사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자국민을 상대로 각종 신문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제 교과서 개편을 통해 내부적인 고구려사의 중국사화 작업을 종결할 태세다. 또 고구려 역사 선전장으로 변한 지안 및 환런 등지의 고구려 유적에 “중국 고구려”라는 설명을 반복해 표시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선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돼온 이같은 중국의 활동에 우리 정부가 취한 대응방법을 보면 중국의 페이스에 끌려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즉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적하면 그 뒷수습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강구되거나 시간만 허송하는 논란을 하기 일쑤였다.

이미 중국은 다음 단계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학계는 이미 2003년 이 문제가 학술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로 제출했지만 당시 정부는 학술 차원의 문제라며 문제 확대를 일축하고 대신 문화사절을 중국에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때라도 최근과 같은 입장의 절반의 강도로 정부가 대응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전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고구려 연구재단이 구성돼 문제해결의 중추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중국의 문제제기에 따라가듯 감정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수 앞선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 상대가 생각지 못한 의표를 찌르는 대응전략을 마련,정부의 종합적인 단기·중기·장기적 실천방안을 진행해야 한다.따라서 이를 조정하는 고구려연구재단의 정부기구화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응방안에서 우선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논의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왕의 우리 국사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성이다.즉 중국에 당하고서야 우리의 실체가 인식된 꼴이 돼 부끄럽지만 국사 교육 없이도 대학갈 수 있고,조기유학 가서 외국 역사 실력만 가득 찬 유학파들이 우리 역사를 책임지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낸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따라서 국사 교육 강화는 민족존립 차원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또한 중국의 조선족과 러시아의 고려인,일본의 재일동포 등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포용이 필요하다.어찌 보면 고구려 유민,발해 유민 그리고 백제 유민의 현재적 잔영 같은 이들이 정작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가장 소중히 국가가 관심을 쏟아야 할 존재들이다.우선 중국 옌볜 조선족사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소리없는 지원을 통한 연대강화가 절실하다.

한편 최근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 대중문화 역량과 IT,인터넷 기술력을 활용한 대응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이들 분야에 고구려문화 콘텐츠가 가미된 내용이 전세계에 ‘고구려=한국’임을 인식시킨다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티베트, 몽골, 베트남, 터키 등 우리와 유사한 역사경험 국들과의 연대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제기된 다양한 논의 가운데 실천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 조법종 (우석대 교수)

<출처 : 서울신문 오피니언 2004. 8. 13>